

온실가스 배출 인구비율 감안해야

독일 총리, 신흥경제국 융통성 허용 절충 ... 중국·인디아 동참 유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과 인디아 등 인구가 많은 신흥경제국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중인 메르켈은 8월30일 도쿄 경제심포지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처럼 절대치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인구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성장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절적인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메르켈의 제안은 중국과 인디아 등 신흥경제대국이 2012년 만료되는 교토기후협약 이후를 대비해 국제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인디아는 교토기후협약에는 서명했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2012년까지의 1차 감축기간에 감축의 무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선진 35개국은 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줄여야 한다.

메르켈은 유럽연합(EU)이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이상을 점하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지금처럼 방치되면 신흥경제권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머지않아 선진권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2위국이다.

현재 선진 8개국(G8) 순회의장국인 독일은 9월 유엔총회 회동에서 중국과 미국을 겨냥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31>